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 기업이 대비해야 할 주요 법안서]

1차시. 데이터 3법의 개요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내용: 해당 차시에서 학습할 학습주제(목차)를 제시해 주세요.▪ 학습목표: 해당 차시 학습을 통해 <u>학습자들이 달성해야 할 목표</u>를 학습내용과 연계하여 작성해 주세요.

▶ 학습내용

1. 데이터3법의 이해
2. 개인정보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

▶ 학습목표

1. 데이터3법의 의미, 특징 및 데이터3법의 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데이터3법 도입배경 및 개인정보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의 위계 파악을 위해 일관성 있는 번호 체계로 작성해 주세요.

I. 데이터 3법의 이해

1. 데이터 3법의 의미와 특징

1) 데이터 3법이란?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이라는 세 법률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그동안 이러한 세 개의 법률 외에도 데이터, 즉 정보를 다루는 법률들은 상당히 많았다. 그러나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이 세 법률이 최근 들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이들 세 법률은 기존의 다른 정보 관련 법률들과 달리 ‘데이터이용의 활성화’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기존에도 정보, 특히 개인정보를 다루는 법률들이 많았고, 지금도 데이터 3법 외에도 많은 법률들에서 (개인)정보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정보의 취급에 대해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데이터3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정보 관련 법률들은 대부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는 지극히 제한적인 방향의 내용들로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위의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를 데이터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다른 정보 관련 법률들과 큰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표 #: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안]

법률명	주요 개정안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모든 상황에서의 개인정보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관련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한 후 <u>가명정보</u>를 통계작성·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상업적으로 이용가능) - 가명정보 이용시 안전장치 및 통제수단을 마련 -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을 통합하기 위해 <u>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u>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u>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u>함 -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및 감독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u>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무총리실 산하)</u>로 변경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신설

<p>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거래에서의 개인정보 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명조치한 개인신용정보로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 -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제공할 수 있음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인 마이데이터(MyData) 도입
---	--

2) 데이터 3법의 특징: 가명정보와 마이데이터

데이터 3법이 ‘데이터 활용 촉진’이라는 모토 아래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정보’가 갖고 있는 엄청난 보호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식별가능한 개인정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정보들의 조합을 통해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도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은 정보의 활용증가에 따라 더욱 강하게 요청되면서 보호방법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로부터 데이터 3법에서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가명처리(비식별조치)한 가명정보의 활용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가명처리를 통해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하고 이러한 가명처리의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러한 가명정보를 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로부터 데이터 활용을 높여서 ‘마이 데이터(My Data) 산업’을 도입하는게 바로 데이터 3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마이 데이터란 단어 그대로 데이터(Data)의 주체가 스스로 자신(My)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간편적으로 “내 데이터의 주인은 나”라는 것으로 간단하고 핵심적으로 설명된다. 마이데이터는 가장 먼저 금융권에서 관심을 보였다. 금융 분야에서 마이데이터란 ‘고객의 동의 하에 제3자가 고객을 대신하여 여러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의 잔액과 거래내역 등 개인금융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지급을 지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¹⁾ 대표적으로는 현재 휴대폰의 금융 어플리케이션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대출, 타행이체, 개인의 신용정보조회 등을 할 경우에는 금융정보주체가 직접 은행에 가서 이러한 금융서비스를 진행했지만 지금은 핸드폰에서 다양한 금융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실행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특정한 하나의 금융권에서 정보주체가 거래하는 여러 금융회사를 등록하여 손쉽게 정보조회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처럼 개인의 정보는 개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 및 신용조사 금융기관에서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바로 정보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처리를 특별히 금융직원의 조언 등이 없이도 스스로 조작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대표적인 금융기관에서의 마이데이터 활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마이데이터의 시작은 금융분야였으나 나아가 공공, 통신, 헬스, 문화서비스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데이터 3법 이전에는 개인정보를 강하게 보호해야한다는 보호정책에 따라, 개인의 신분을 드러낼 여지가 있는 데이터는 수집과 가공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즉 직접적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데이터)는 물론이고,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의 신분이 드러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정보(데이터)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로 간주되

1) 마이데이터의 도입은 개인이 지닌 심리적 약점을 보완함으로써 개인의 자산관리 방식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받는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권민경, 마이데이터의 넋지효과, 자본시장포커스, 자본시장연구원 2019-10호,

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법률에 저촉되어 불법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정보의 적극적 활용'이라는 모토 아래 데이터 3법이 개정되어 이제 기업들은 개인의 동의없이도 비식별화(가명처리된) 데이터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개인정보 거버넌스의 일원화의 필요성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데이터 경제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어 '데이터 3법'은 산업계를 중심으로 하여 매우 긍정적인 개정입법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2. 가명정보 활용 제한

정보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3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개인정보의 필요성은 감소되지 않았다. 따라서 설령 가명처리된 정보라 할지라도 정보의 활용 범위가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데이터 3법에서는 설령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정보활용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그리고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에 한해서만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비식별화(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첫째, 통계작성이란, 특정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한 수량적 정보를 의미하며, 둘째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 연구 및 민간투자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로 제한되어 있고, 셋째, 공익적 기록의 보존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열람할 가치있는 기록정보를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데이터 3법은 가명정보를 통해서 개인정보 활용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나, 이처럼 활용 가능성이 커졌다고 하더라도 가명정보의 활용은 여전히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통한 피해를 줄이고자 법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설령 비식별화(가명)된 정보라 할지라도 이러한 여러 가명정보를 취합하여 결합하게 될 경우 정보주체가 특정되어 식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비식별화(가명) 정보를 결합할 때에는 정보처리기관이 아닌, 제3의 공신력이 있는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 제1항). 또한 이렇게 가명정보의 결합을 수행한 전문 기관 또한 결합된 정보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개인식별의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로 제한하여 외부반출을 허용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 제2항)

그밖에도 개인정보처리자는 비식별화(가명) 정보를 처리할 때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를 별도로 분리해 관리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즉,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적절하게 가명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또는 4억원의 과징금(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6),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3. 데이터3법의 관계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은 병렬적인 독립적 관계가 아니다. 즉 데이터 3법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사회전반을 다루는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는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대상은 특정 당사자 및 기관이나, 개인 등으로 한정되지 않고, 공공기관, 사업자, 법인,

단체, 개인 등의 사회구성원 모두를 법률 적용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이 일반법적 성격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개별 법률이 특별법이 되므로, 특별법우선원칙(특별법의 입법 목적은 특수한 사항을 규율하는 데 있으므로, 특수한 사정에 따라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일반법 보다 특별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의해 「개인정보 보호법」 보다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해당 법률 규정이 우선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특별법우선원칙에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모두 관련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적용제한, 분쟁조정업무, 단체소송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II. 개인정보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

1. 데이터 3법 도입배경: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1) 4차 산업혁명의 등장

그렇다면 그동안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에 주력하는 입법경향이 왜 데이터활용을 촉진하는 데이터 3법으로 개정을 추진한 것인가? 이는 최근 10여년에 급속도로 성장한 정보활용 서비스의 발전에 있다. 물론 그보다 앞서 컴퓨터 및 인터넷의 발달을 통한 전자정보의 ‘생성’이 획기적인 산업혁신으로 간주되던 시절이 있었다. 이러한 컴퓨터의 기술을 기본으로 이뤄지는 20세기 후반의 산업혁명을 제3차 산업혁명으로 불렀다. 그러나 이러한 컴퓨터의 발달에 따른 정보의 ‘생성’에 따른 3차 산업혁명을 넘어 이제는 정보의 다양한 ‘활용’에 초점을 두고 ‘4차 산업혁명’로 회자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다른 말로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으로도 불린다. 즉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를 전제로 하는 산업혁명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바로 ‘정보통신기술’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3차 산업혁명과 구별되는 4차 산업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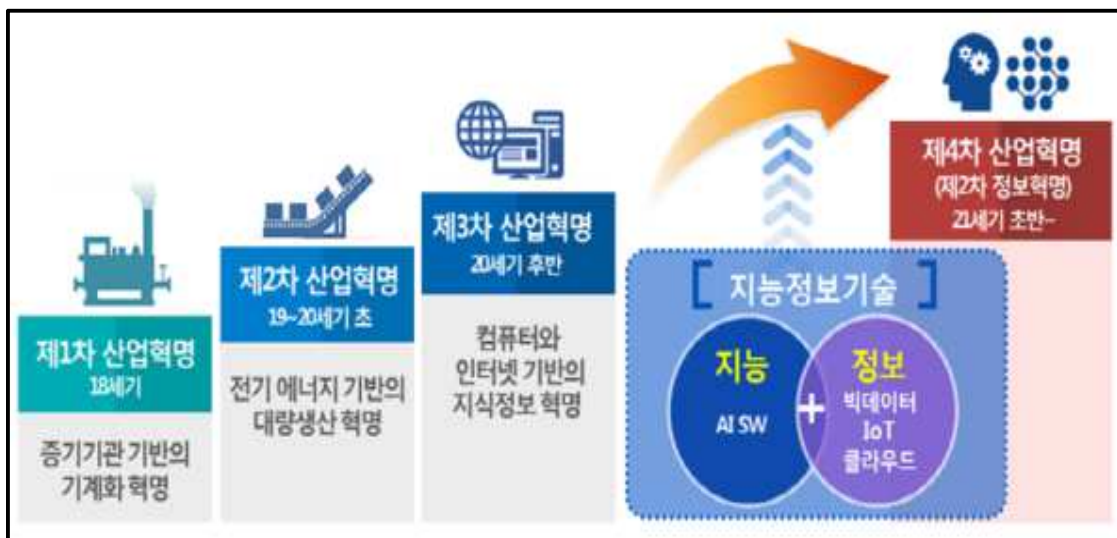
4차 산업혁명을 특징짓기 위해 3차 산업혁명과의 대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부터 언급되기 시작하였는데, 3차 산업혁명은 다른 말로 ‘반도체가 중심인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의 혁명’으로 불리었다.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는 3차 산업혁명을 농업혁명(1차), 산업혁명(2차)에 이은 제3의 물결로 부르면서 ‘정보의 혁명’이라고 특징짓기도 하였다. 3차 산업혁명에서 정보가 가져주는 변화는 ‘공유’라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전달방식이었다. ‘공유’라는 기술의 발달로 정보교류 및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손쉬워지고 편해졌다는 점이 바로 3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혁신이었다.

이러한 3차 산업혁명에서 보다 진보된 형태로 4차 산업혁명이 언급되었다. 즉 이제 21세기 초반에 또다르게 변화된 산업환경이 등장하였는데,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변화된 산업환경은, 기존의 제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면서 여기에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과 정보(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 결합’이 더해진 새로운 시대를 의미한다.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기술의 진화’로 불리는 ‘제2차 정보혁명’으로 설명된다. 즉 ‘제1차 정보혁명’이 3차 산업혁명이었다면, 동일한 정보의 혁

신을 가져오고는 있으나 4차 산업혁명은 제1차 정보혁명인 3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이 더하여진 모습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특징은 오늘날의 대표적인 ‘최첨단 디지털 기술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해 클라우드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대표적인 기술로 물리학(physical), 디지털(digital), 생물학(biological)을 언급하면서, 이들 기술로부터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가상공간구축, 인공지능을 통한 자동화 및 지능적 제어 등을 통해 이러한 요소가 결합된 단순히 제품의 향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더욱 직접적으로 무선통신이 접목되는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특징지었다.²⁾

<그림 #: 4차 산업혁명의 의미³⁾>



이처럼 오늘날의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정보가 더더욱 중요한 요소라 각광받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즉 앞선 3차 산업혁명이 ‘지식정보의 혁명’이라 불리었듯이 당시의 정보 기술(IT) 발전에서는 객관화되거나 일반적인 지식정보의 공유, 즉 보편화가 큰 기능을 하였던 반면에,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개별화된 맞춤형 정보가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즉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산업발전은 인공지능을 통해 각 개인에게, 개인의 취향과 필요한 정보들을 맞춤형으로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서비스는 정보의 주체와 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계 모두에게 여러 의미를 가져온다. 산업계에서 주목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보주체에게도 자신의 정보활용에 대한 엄청난 편리함으로부터 정보활용의 자발적 동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함께 작용하였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법률의 발빠른 개정이 촉구되었던 것이다.

2) 클라우드 슈밥,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새로운 현재 2016, 36-50면.

3)

https://terms.naver.com/imageDetail.nhn?docId=3548884&imageUrl=https%3A%2F%2Fdbstatic.umb-phinf.pstatic.net%2F1969_000_1%2F20170425181908800_VJP2LO2GL.png%2Fka3_1982_i1.png%3Ftype%3Dm4500_4500_fst%26wm%3DN&cid=42346&categoryId=42346

<그림 2: 지능정보기술 개념 및 특징4>



3) 데이터 3법 개정 촉구

이러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의 결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정보의 활용이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에서 규제를 내용으로 하던 정보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촉구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던 3차 산업혁명이 ‘지식정보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당시 관련 법률들은 주로 ‘정보보호’를 목적으로 정보의 활용을 제한하며 규제하는데 방점을 두고 입법이 되었던 반면에, 이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정보활용기술의 발달로부터 혁신적인 맞춤형 정보 활용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제는 ‘정보의 적극 활용’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되는 디지털환경변화에 민감한 산업계를 중심으로 하는 목소리에 동참하여 ‘데이터 3법’의 개정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이러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서비스범위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딜레마가 함께한다는 점에서 과연 개인정보 활용의 허용과 제한을 어디까지로 둘 것인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맞춤형 정보서비스의 제공은 정보주체에게 시간절약, 비용절약 등의 많은 장점이 있음은 명백하다. 이에 따라 금융권을 시작으로 문화, 교육, 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업계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개인정보에 대한 서비스활용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고, 이러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무궁무진한 이용가치의 증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3차 산업혁명 당시 우려되었던 정보의 오·남용의 문제는 여전히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정보의 활용이 극대화되면 될수록 정보는 전파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민감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유출 등의 오남용의 피해 또한 과거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위험이다. 이에 따라서 데이터3법에서의 과제는 ‘정보의 활용’과 함께 ‘정보

4) 미래창조과학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2017.1.24., 11면.

의 보호'에 대한 장치 및 범위, 기술 등에 대한 고민이 함께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를 다루는 각종 기관, 서비스업계, 정보처리관리자 더 나아가 개인들에게도 정보의 중요성과 함께 정보의 잘못된 활용시 어떠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뤄지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 정보 관련 법률의 보다 적극적인 보호개입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시대라고 하겠다.

2. 데이터 프라이버시보호와 개인정보보호(데이터 3법의 명암)

1) 데이터3법 장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보서비스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산업계를 중심으로 촉구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데이터 3법'이 명명되면서 2018년 11월에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다가 시행령 개정이 먼저 이뤄진 다음에서야 데이터 3법은 2020년 1월에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러한 데이터 3법의 통과는 특히 금융분야에서 각광을 받았다. 정보주체의 소비 및 투자행태, 위험성향, 자산, 근로환경 등을 반영하여 고객(정보주체)의 니즈를 상당히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이러한 금융상품을 제공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블루오션이 된 것이다. 이처럼 빅데이터가 금융분야와 결합하게 됨에 따라 '금융혁신'으로 불리는 '오픈뱅킹(open banking)'⁵⁾이 등장하게 되었다.

금융분야에서 시작된 빅데이터의 활용은 굉장히 산업계에 매력적이어서 쇼핑물, 광고, 교육, 의료, 문화산업, 스포츠 등 거의 전방위적으로 활용가치에 급상승되었다.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제공받고, 내 자산과 소비 및 투자형태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소개받거나, 나의 현재 상황에 걸맞는 문화 및 여가활용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자신의 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주고 필요한 적재적소의 상품을 탐색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됨으로써 정보주체인 개인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인 기술발달로 간주된다. 빅데이터의 활용은 금융상품을 가입하거나 필요한 용품을 구매하기 위해 일부러 은행이나 쇼핑물에 찾아가지 않아도 됨으로써 개인의 여가시간의 늘려주는 혁신적인 기술로서 충분히 정보주체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이 보다 더 정교하게 이뤄지기 위한 개인 및 산업계의 욕구도 계속 증가하는 바, 이러한 정교한 서비스의 제공은 더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개인정보의 오남용의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피해는 회복될 수 있는 피해와 회복될 수 없는 피해가 크게 분류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금전으로 해결가능한 피해는 원상복구가 가능하지만, 신체에 대한 피해, 나아가 개인정보의 유출과 같은 피해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빅데이터의 활용에만 귀기울일 것이 아닌, 오남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2) 데이터3법의 단점

5) 오픈뱅킹이란 은행의 송금·결제망을 표준화하여 개방해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 결제, 송금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오픈뱅킹은 2019년 10월 30일에 시범 운영되었으며, 2019년 12월 18일부터 정식으로 본격 가동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은행 16곳과 31개 핀테크 기업에서 접근이 가능해졌다.

데이터 3법을 통한 정보이용의 활성화는 특히 개인정보의 노출에 대한 두려움 뿐만 아니라, 제공되어 활용되는 개인정보의 소유가 과연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정보의 활용가치가 높아지게 됨에 따라 정보의 산출적인 경제적 가치도 극대화되었기 때문에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또한 개인정보의 활용은 비단 민간서비스업체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편적인 복지를 구현하는 일이 되겠으나 과연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 것인지 논란이 될 수 있다.

가. 개인정보의 노출과 식별가능성

먼저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 이용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만큼 개인정보의 노출이 가장 우려된다. 개인정보 이용과 보호의 두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데이터3법에서는 ‘가명정보’의 활용이 가장 크게 부각되었지만, 문제는 하나의 서비스에서 활용되던 가명정보가, 여러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가명정보가 노출되어 결합되는 경우 자칫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명처리가 만능은 아니어서 결국은 개인정보의 노출이 가장 우려된다고 파궤다.

예컨대, 서울시 종로구에 사는 40대 여성인 구모씨라는 가명정보와, 40대 여성 구모씨의 세무사라는 가명정보와 그리고 세무사인 구모씨가 특정 커피매장을 즐겨찾는다는 가명정보, 40대의 특정 커피매장을 즐겨찾는 구모씨가 이용한 정보 등이 결합될 경우 흔하지 않은 성씨와 또한 흔하지 않은 직업과 흔하지 않은 커피매장을 결합하다보면 특정 개인을 떠올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러한 40대 여성으로 커피를 좋아하는 또는 세무사인 구모씨가 특정 병원을 이용하여 병명까지 밝혀지게 된다면 특정 개인의 굉장히 민감한 정보까지 노출될 위험이 있고, 이는 단순히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넘어서 보험가입이라던가 직장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위험까지 처해지게 된다.

즉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가명처리를 통한 개인정보 활용의 문을 열리게 되었으나, 가명정보라는 것만으로 개인의 특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가 이뤄져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나. 개인정보의 소유권 여부

둘째, 개인정보 이용의 활성화에 따라 데이터3법에서는 가명정보를 전제로 개인의 동의없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수집된 개인정보가 누구의 것이냐가 문제가 된다.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그 정보의 대상인 개인의 소유이다. 따라서 어떤 서비스업체가 이러한 특정 개인의 정보를 활용하여 어떤 가치를 창출해냈다면 이러한 이익은 그 개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체는 데이터3법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인 개인의 동의없이도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가명처리하여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게 되더라도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정보사용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과연 개인의 정보를 동의없이 무료로 사용하면서 얻게 되는 이익이 온전히 서비스업체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지 논란이 있게 된다.

다. 개인정보보호 vs 공공이익

셋째로 개인정보 활용은 업데이트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정부 24(<https://www.gov.kr/portal/main>)와 같은 사이트에서 개인 관련 다양한 서식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과 같은 서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동사무소 같은 곳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는 간단한 개인정보 인증을 통해서 편리하게 앉은 자리에서 이러한 서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nhis/index.do>)에서도 보험료의 증감을 확인하고 자신이 어떠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제공받을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인정보를 활용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한다. 문제는 모든 개인이 이러한 자신의 정보 활용을 긍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민간서비스업체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개인정보의 활용이 시급하나 과연 개인의 정보활용 동의가 개인이 이러한 정보유출 등의 오남용시 발생하게 될 피해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동의하는지 한번 제고해보아야 한다.

III.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제도 개관

1.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개관

오늘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은 오늘날로부터 약 10여년전인 2011년 3월 29일에 법률 제10465호로 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이다. 동 법률은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15차례 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 개정은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어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다. 물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절차 및 의무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들도 있다. 그러한 대표적인 법률로는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또한 현재는 폐지된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이 있었다. 폐지된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로, 1994년 1월 7일 제정되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3월에 제정되면서 2011년 9월 30일에 폐지되어 현재는 효력이 없다. 즉,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전에는 개인정보 보호의 주체를 민간과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폐지된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를 다루었던 반면에,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에서는 민간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여 개인정보보호 절차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그동안 개인정보 처리주체인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구분을 없애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통합된 일반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여전히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이 현재까지도 효력을 갖고 있는데 이들 법률들은 개인정보의 처리 보다는 각각 다른 목적, 즉 각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각 정보처리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절차들을 담고 있다.

[도표 #: 개인정보보호 규제 법률의 변화과정]

정보처리기관	개인정보보호 규제 법률	법률변화	일반법 제정
--------	--------------	------	--------

공공기관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1994.1.7. 제정]	→	폐지 [2011.9.30. 폐지]	+ 개인정보보호법 [2011.3.29. 제정]
민간기관	정보통신망법 [2001.1.16. 전면개정]	→	개정	
	신용정보법 [1995. 1.5. 제정]	→	개정	
	위치정보법	→	개정	

2. 법률의 혼재와 데이터 3법 개정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에서 종래 규제하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서 개인정보 처리기관 입장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적용 법률에 대한 처리기관의 혼란에 따라 정보주체인 개인에게도 그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법률정비와 관련된 요청이 끊임없이 있어왔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2020년 2월 4일, 소위 ‘데이터 3법’이라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개정이 이뤄지면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통합되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은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적 환경변화에 부응하는데 초점을 두었는데, 오프라인 사업자 뿐만 아니라 온라인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업체 측이 개인정보 처리의 모든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데이터 3법 개정의 주요 쟁점으로는 첫째, 「정보통신망법」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그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되었으며(2020년 2월 4일), 둘째,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이 변경되었고(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 등), 셋째,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편의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넷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나아가 다섯째, 「신용정보법」에서 ‘신용정보’ 등의 개념을 정비하고, 여섯째, 「신용정보법」에서 신용정보주체인 개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하는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가 강화되었으며, 일곱째, 「신용정보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유관 법률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조항들을 정비하였다.

3. 유관 법률의 법적 지위 - 일반법과 특별법 적용원칙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앞서 언급했듯이 제정전 개인정보 처리기관, 즉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따라 각자 여러 법률들에서 규정하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내용이 상당 부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되면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법률인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및 「위치정보법」 등은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특별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동일한 사항에 대한 법률에 일반법과 특별법의 지위를 두어서 구분하는 실익은 무엇일까? 이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여러 법률들의 법적 규제가 다양하고 심지어 기본권을 침해하는 형사제재에 있어서 법정형도 차이가 있으므로, 적용 법률에 우선 순위

를 두지 않게 되면 수사기관, 공소기관 및 심판기관의 자의적 적용이 가능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유사한 사안에 있어서 다른 법적 제재로 말미암아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동일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들에, 일반법 또는 특별법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법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만일 특별법의 규정이 없다면, 일반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있다.

그렇다면 이때 일반법과 특별법의 특징은 무엇인가? 먼저 일반법이란 어떤 사항에 관하여 널리 일반적으로 규정한 법률로서,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사람, 지역, 기간 등)에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는, 일반적으로 적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에 특별법이란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일반법과 달리 제한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그 효력을 제한적으로 미치도록 규정한 법령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보면 특별법이란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을 말하는데, 각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을 목적으로 정보활용에 대한 규제를 내용으로 한다던가(「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또한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의 도모를 위해서 정보 중에서도 특히 신용정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던가(「신용정보법」), 또한 위치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생활향상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내용(「위치정보법」)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해 각 개별 법률은 제정되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각 법률들에서 정보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및 보호되어야 하는 정보주체는 각 법률의 목적에 따라 제한하여 적용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동일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과 특별법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러한 일반법과 특별법의 법적 관계에 대하여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일반법과 특별법이 저촉되는 경우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고, 만일 특정 사항에 대하여 특별법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법이 적용된다고 한다(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리고 이때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⁶⁾ 이러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되는 개인정보처리 기관 및 정보주체자는 우선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에 따라 먼저 적용되며, 이들 특별법에 해당 사항을 규제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따른다.

4. 개인정보보호 관련 다른 국내법

「개인정보 보호법」 외에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여러 법규들이 있다. 대표적인 법률로는 위에서 간단히 살펴본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보호법」 등 외에도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등이 있고, 또한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등이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관련 법규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다른 목적으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모두 포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규로 이해되고 있다. 주요 법률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6)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4헌가12 전원재판부

1)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제1조)으로 2001. 1.16.에 전부개정⁷⁾ [시행 2001.7.1.] 되었다. 제1조의 법률 목적에서 잘 드러나듯이 동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양대 목적으로 하여, 법률의 구성에서도 제2장(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과 제4장(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조성)에서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과 관련한 내용을, 그리고 제5장(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에서는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 및 관련 업체들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2001년 전부 개정 이후 현행법 개정까지 47차례나 개정하였으며, 현재 2022년 6월 10일에 일부개정하여 2022년 12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예정 법률의 개정이유는 첫째,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등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침해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대응체계강화와 함께, 둘째, 피해예방차원에서 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수집 발생시의 국가 차원의 대응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2) 신용정보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여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5년 1월 5일에 제정되었으며, 1995년 7월 6일에 시행되었다. 법률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신용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에 특화된 법률이다. 신용정보에 대한 활용이 단순히 실물경제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공간에서,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더욱 그 보안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데이터3법의 개정에 따라 빅데이터의 활용은 금융산업에서 가장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오픈뱅킹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의 신용은 이제 보다 손쉽게 접근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편리함과 달리 개인신용의 무분별한 노출도 손쉽게 가능해짐에 따라 더욱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다. 특히 최근의 개정을 통해 개정 신용정보법은 신용조회업을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으로 세분화하면서 고유업무의 범위를 축소하여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구조를 새롭게 개편하고 업(業)의 정의를 새롭게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개편이 빅데이터와 결합하여 어떠한 파생효과를 가져오는지 눈여겨보아야 한다.

신용정보법에서 개인(신용)정보보호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제6장(신용정보주체의 보호)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과 활용에 대해 엄격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절차,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주의사항,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전송요구권자의 범위, 개인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그리고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동의의 원칙 등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정보법은 오늘날까지

7) 즉 동법은 1986.5.12.에 제정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 강화 등 당시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면개정되었다.

40차례 개정되었으며, 현재 시행 법률은 2020년 12월 29일에 개정된 법률이다.

3) 위치정보법

개인정보는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내재된 변하지 않는 고유의 정보들도 있겠으나,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개인정보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개인의 위치정보이다. 개인의 위치정보 또한 개인의 사생활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이러한 개인의 위치정보 또한 원칙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1월 27일에 제정되었다. 오늘날까지 27번 개정되었으며 현재 시행중인 법률은 2021년 10월 19일에 개정되었는데[시행 2022.4.20.], 현행법의 개정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에 대한 육성과 함께,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졌다. 개정 전 법률에서는 위치정보의 정의가 매우 광범위하여 위치정보 수집 목적 없이도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까지 위치정보의 개념에 포함하여 사업자 등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로부터 개정법에서는 위치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법 규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에 따른 적절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및 보완되었다.

특히 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또는 제공할 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에 대해 동의를 받도록 개정되었으며(제18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나아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처리방침을 공개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동법 제21조의2를 신설하였다.

4) 기타 다른 목적의 규정

-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